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2026. 2. 26.(목) 14:00
송악읍행정복지센터
대 강 당

-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결과보고서

당 진 시 의 회
[의 회 사 무 국]

-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결과보고서

충청권 광역행정 개편 논의 확산으로 통합 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권한 및 재정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항만·에너지 중심 도시인 당진시의 지역발전 기회와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의정토론회를 개최함

1 개 요

❍ 일 시 : 2026. 2. 26.(목) 14:00 ~ 16:00

❍ 장 소 : 송악읍행정복지센터 대강당

❍ 주 제 :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 주 최 : 당진시의회

❍ 참석인원 : 50명(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 참 여 자 :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등 6명

좌 장	· 송창석(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발제자	· 김찬수(지역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최연숙(당진시의회 의원) · 김영철(전 경기도소통협치국장) · 이상인(자치분권연구소 소장) · 조상익(당진시농민회 교육국장)

※ 사회 : 의회사무국 구수회 정책지원팀장

2 발제 주요 내용

1 발제 -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장)

❍ 행정통합 추진 배경 및 목적

-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교통망 및 사회기반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치권 및 재정 자율권 확보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쟁력 강화: 대전의 R&D 기반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인프라를 연결해 연구-개발-생산 원스톱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
-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인구 약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거점을 마련

❍ 행정통합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메가시티 경쟁력 확보 및 행정효율성 증대: 대전 R&D 역량과 충남의 제조기반의 결합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중복되는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통합 특별지원금(20조원)과 중앙 권한 이양으로 지역 발전에 긍정적 기대 가능함
  - 광역 교통인프라 혁신 및 지방소멸 대응력 강화: 통합 지역 간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동일 생활권을 구성하고,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여 자립 능력 강화 및 지역 이탈을 예방할 수 있음
- 부정적 효과
  - 빨대효과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인구 및 자원이 쏠리는 빨대 효과 우려가 존재함. 이에

따라 충남 농어촌 및 외곽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갈등 비용 발생: 행정체계 통합으로 주민의 관공서 방문이나 민원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통합 지자체의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통합이 당진시에 미치는 영향(위기・기회 요인)

- 경제적 측면: 통합에 따른 대정부협상력 및 투자유치 역량 증대로 기존 철강・에너지 중심 사업이 대전의 R&D역량과 결합하여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수소 및 신에너지 산업 거점 조성, 당진항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통합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대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우수 인력・의료・교육에 대한 접근문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행정서비스나 수요 등이 대전・천안 등 대도시로 집중되어 인구 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치적 측면: 대정부 협상력이 강화되고, 강화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탄생이 가능하나, 통합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전 중심의 정책결정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의 이익을 요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환경규제 등에 있어 지역간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음

❍ 당진시의 대응 전략

- 산업 전략: 반도체산업 보조・지원 허브 육성 및 기존 산업(철강・화력) 경쟁력 강화 병행 추진
- 권한 및 재정 확보: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유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준비 및 산업전략과 연계된 기업 유치 노력 필요

3 토론 주요 내용

1 지정 토론 - 좌장 :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장

❍ **(최연숙 의원)** 통합시 당진항 중심의 물류 기반 및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가능함

❍ 통합을 통한 대전 R&D 인력·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입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당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로 지역 내 국유지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또한 이양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핵심임

❍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진시의회의 견제·감시 역할과 17만 당진 시민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통합의 유불리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시가 통합지자체 내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함

❍ **(김영철 전 경기도소통협치국장)**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소멸 극복은 우리나라 모든 정부의 과제였음. 신행정수도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된 안타까운 상황임.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통합 지자체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지방정부 내의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이 필요하며, 통합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및 견제·감시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현재 법사위 보류 상태인 특별법이 3월 3일 본회의 전까지 통과

되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가 출범하므로, 이번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함

- **(이상인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소멸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며, 기존 행정체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지역으로 더 큰 권한과 재정을 주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임
- 통합에 따른 20조원의 특별재정이 지원되는데 이에 따른 당진시만의 실현 가능한 계획 및 과제를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송전망 및 지중화 문제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요구되는 주요 문제를 시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합특별법은 자치범위를 넓혀서 지역의 경제적 토대까지도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별법(제179조)에는 통합 단체장에게 2만 킬로와트 정도까지 자체 생산하는 허가권이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권한을 기업유치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여야 함.
- 이번 통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과 시민사회 생태계와 연계를 통해 당진의 요구를 관철할 필요가 있음
- **(조상익 당진시농민회 교육국장)** 통합 시 경제적 부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급적 통합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만, 행정 통합에 따른 행정접근권 약화, 민원 비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대전 집중, 현장 창구 축소 등 행정 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함. 정책 우선순위 또한

대전 중심으로 기울어진다면 주변부의 상대적 박탈감 및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음. 따라서 통합 지자체의 중심을 하나로 두는 방식이 아닌 다핵구조 설계가 필요함. 서해안 권역 행정 원스톱 서비스, 물류 에너지 컨트롤 타워 등의 기능을 권역별로 배치하여야 함

- 통합에 따른 행정기능, 예산 배치 등의 로드맵을 사전에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통합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커지는 만큼 감시·견제 장치를 법률에 우선 반영하여야 함
- 당진시 차원에서 통합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통합에 따른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통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통합 효과에 기반한 각종 사업 유치, 대전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 균형을 해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되서는 안될 것임. 당진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의 이익은 키우되 불만을 줄이는 실질적 대안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고민해야 함

2 청중 토론 - 좌장 :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장

- **(당진YMCA사무총장 권중언)**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권이 수도권과 대전권으로 구분되는 충남대전 통합은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의 경우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통합과정에서 당진만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졸속 통합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모든 문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당진 현안을 통합과정에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함. 통합 관련한 토론회가 당진에서 열리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인권위원장 송영팔)**

질의 1 통합 시 인구가 많은 대전 출신 시장이 당선되거나 대전 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 1 (최연숙 의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이 배출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령 출신인 김태흠 도지사가 당선된 사례와 같이 집권당이나 정치적 지형이 당선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질의 2 통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긍정적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답변 2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에서 통합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통합을 통해 여러 가지 예산이나 권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 경우, 파리나 오사카 등 점차 주변 도시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경제권을 만들고 번영하게 됨. 우리도 통합 시 문제가 예상된다고 머뭇거리기보다는 통합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문제점은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배병찬)** 통합이라는 중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통합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인 주민자치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음

❍ **(대호지면 주민자치회장 곽규원)**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주장이 나왔는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듦. 통합 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합을 통해 긍정적인 면은 살려나가되, 부정적인 면은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마무리

❍ 충남-대전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의 높은 관심에 비해 당진 지역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의정토론회를 준비함. 막연히 반대하거나 찬성하기보다는 통합에 대한 실익을 마주하고, 당진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임. 미리 준비하면 당진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임.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귀중한 의견들은 당진시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당진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

4 토론회 현장 사진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일시 2026. 2. 26.(목) 14:00
장소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주최 당진시의회
토론
좌장
발제
토론
토론

5 관련 보도자료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	보도자료	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자	2026. 02. 27.	배포기관	당진시의회(의회사무국 홍보팀)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홍보팀	담 당 자	황윤정 주무관(041-350-4831)
첨부자료	사진 2매	문서번호	26-15호

당진시의회, ‘충남-대전 통합’ 보류 국면에도 선제적 대응 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는 지난 2월 26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당진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행정 개편 논의 보류와 관계없이, 향후 논의 재개 시 발생할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및 재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에너지 거점인 당진시의 정책적 소외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장, 김영철 전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조상익 당진시농민회 교육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시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선제적 정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